

독자권익위원 칼럼

신연범

독자권익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최근 광주연구원의 시·도민 인식 조사에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청년일자리 및 창업확대'(36.5%)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또한 통합특별시 출범이 지역발전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는 긍정응답이 59.1%로 부정응답(14.6%)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20대 이하 청년층의 긍정응답 비율은 50대 이상보다 낮게 나타나 세대 간 기대감의 차이도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영광군에 위치한 '서로마을'을 찾아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서로마을'은 전남도가 조성한 20개 청년마을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한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수제버거 가게, 목공방, 청년 공유공간 등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주거와 일자리,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로마을' 외의 지역 청년들도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까.

얼마 전 발표된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은 우리 지역이

청년이 떠나는 지역, 미래도 함께 떠난다

직면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올해 1분기 호남권 순유출 인구는 7253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0~29세 청년층 순유출이 545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유출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 달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난 것이다. 청년들은 왜 광주·전남을 떠나는 것일까.

지역경제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청년 유출의 원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다.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수도권과 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교육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 감소는 지역 상권침체와 기업 매출 부진으로 이어진다.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신규 채용을 축소하게 된다. 결국 일자리 부족은 다시 청년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도, 경제문제도 아닌 지역의 미래 경쟁력에 관한 문제다.

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기존 사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한다.

청년층 유출은 단순히 노동력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미래의 창업가와 소비자, 지역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것이다. 광주의 연구개발 역량과 전남의 산업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 미래모빌리티, 에너지산업, 데이터 산업, 바이오헬스 등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취업하고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결국 기업이 모이고 산업이 성장해야 청년도 머무를 수 있다.

지금의 청년 유출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청년이 줄어들면 시장이 축소되고, 시장 축소는 다시 투자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을 방지한다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기회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합특별시의 모습이며, 지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이용석

농협 전남본부 대외협력부장



전남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지다.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쌀과 과수, 축산, 원예 등 다양한 농축산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면에는 심각한 농촌 소멸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많은 농촌 마을에서는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역답게 도서지역 곳곳에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은 농업인과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의 가장 큰 강점은 물론 전남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촘촘한 점포망이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농촌과 도서지역의 사정은 다르다. 일부 먼 지역과 섬 지역에서는 농협이 사실상 유일한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민들은 농협을 통해 예금과 대출, 연금 수령, 공과금 납부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정보와 행정서비스도 접하고 있다.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농협

특히 신안군과 완도군, 진도군 등 섬 지역에서는 농협의 존재 의미가 더욱 크다. 주민들이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육지까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고령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수익성만 따진다면 유지가 쉽지 않은 점포들도 있지만 농협은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농협의 역할은 금융서비스에만 머물지 않는다. 농촌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전남농협 농업인 해피바스타이'와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은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무료 건강검진과 법률·문화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경로당 지원, 김장 나눔,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 농촌의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인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스마트기기가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여전히 대면 금융서비스가 절실하다. 농협 창구 직원 한 명, 농협 점포 하나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이자 사회적 안전망인 이유다.

이제 농촌 금융망은 단순한 영업조직이 아닌 국가적 공공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 농촌 주민들도 도시 주민들과 동등한 금융 접근권을 누리야 하며 지역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 금융 인프라 유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러 농협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복지 사업의 사회적 가치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의료·복지·문화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기능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농협의 자체 재원과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인정하듯 농협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농촌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도,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협이 농촌 현장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금융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다.

전남의 수많은 농촌 마을과 섬마을에서 오늘도 농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농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농협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촌 금융·복지 인프라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 전체가 인식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때다. 그것이 곧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취재수첩

소수정당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이산하

정치부 차장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현안 중 하나인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야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섭단체는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의원 집단이다.

현재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의사일정 협의 등의 의회 운영의 핵심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라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들은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수준의 대표성 원칙에 부합하는 교섭단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가 단순 의석 문제가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 이 제도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는 장치라는 의견이다.

진보당 당선인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안건 협의체를 100% 민주당만으로 구성했다"며 협의의 내용 공개와 시민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도 성명을 내고 "출범 실무협의체에 비민주당 의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 기준도 의원 10분의 1보다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칼자루를 쥐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냉랭하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면 소수 정당의 원내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전남의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야 할 거대 여당이 도리어 소수 정당과의 협치를 발로 차버리는 형국이다.

의회(議會)는 말 그대로 의논하는 곳이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독주나 소수 정당의 원천 배제는 의회 정치의 실존을 의미한다. 첫 단추를 채우는 교섭단체 구성에서부터 포용과 상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지역 정치의 발전은 다양한 민의를 인정하는 협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통합특별시 '2차공공기관이전' 집중돼야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활성화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9월 안에 대상기관 선정과 이전 일정 등의 로드맵을 확정 짓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발주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결과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또 2차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여건 개선 등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안에 혁신도시개발과 혁신도시지원과를 신설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 개 공공기관이다.

이에 따라 새 지방 정부가 들어서는 내달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자치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TF(특별팀) 성격의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단은 에너지와 농수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목표기관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로 선정했다. 이중 22개 기관은 이달 말까지 직접 방문해 광주전남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키로 했다.

현재의 분위기는 오는 7월 출범하는 광주특별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주 특별시에 더 나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대한 하되, 저변처럼 분산시키면 집중 효과가 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2차 이전은 지역별 안배보다는 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 광역행정통합을 이룬 광주특별시를 언급하며 "먼저 통합을 했고, 법률상 우선하도록 돼 있어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라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의 지역 정치권은 이런 국면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전남 농어촌 의료공백 커지는데...대책은

전남 농어촌지역의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책이 안 보인다. 공중보건 의(이하 공보의)는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장기 대책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효과 또한 미지수다.

현재 전남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신규 173명 등 총 411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65명 줄어든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공보의 수는 2021년 637명에서 2022년 612명, 2023년 586명, 2024년 534명, 2025년 476명 등 갈수록 줄고 있다.

공보의가 없는 곳도 2024년 81곳에서 지난해 126곳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 업무를 볼 수 있게 가능해지면 시범사업을 74곳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87곳이 공보의 공백인 상태다.

문제는 농어촌·도서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의과대학을 나온 공보의 수요가 많은데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보의는 통상 의사·치과의사·한 의사 자격을 가진 병역 미필자 중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감응하는 직군을 말하는데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179명)보다 51명 줄어든 128명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가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장기 근무 유도 지원과 비대면·원격 협진 체계 구축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또 중장기 대책들도 한계가 뚜렷하다. 지역에 10년간 의무 복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도 현재 직면한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고 제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 의과대학 설립도 차질을 빚고 있다. 통합 의대 신설에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소재지와 대학분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2028년 개교 목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수요가 높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8.3%나 되는 등 갈수록 늘고 있어 의료공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 사병(18개월)의 2배인 공보의(36개월) 근무기관 단축, 상급종합병원 확대 등 단기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중장기 대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는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를 맺었습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